

人文論叢

81권 1호

2024년 2월

서평

[www.kci.go.kr](http://www.kci.go.kr)



# 진지전의 돌파구 제시: 송진우, 동아일보계열,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조명

류시현\*

[서평] 윤덕영(2023),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혜안, 597쪽

## 1. 새로운 지식과 관점의 제공

책의 제목은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이다. 시간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공간적으로 식민지 조선과 세계를 함께 조망하고 있다. 부제는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다. 조선의 민족운동을 ‘한국 자유주의’, 송진우, 동아일보 등의 주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윤덕영(이하 필자)은 부제에 관해 “이 책은 일제하 송진우의 행적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통해 일제하에서 형성된 한국 자유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p. 578, 이하 면수만 기재)이라고 밝혔다.

역사 연구 가운데 ‘기원’을 밝히려는 접근은 긴장감을 준다. 왜냐하면 단선적인 선명함을 희생하고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다기한 원인과 결과를 복잡한 정치적 권력관계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사상사에서 ‘자유주의’를 규명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긴장감을 준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에게 그나마 익숙한 정치사상인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무정부주의) 등과는 다른 접근이기 때문이다.

서평은 책의 소개와 이해를 독자에게 전해야 한다. 책 소개의 일반적

방식은 목차에 근거한 방식이며, 이 책은 일제강점기 송진우와 동아일보계열의 활동을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1부 세계의 정치와 사상을 배우다, 2부 식민지 조선의 개혁을 주장하다, 3부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과 민족협동전선운동, 4부 합법적 정치운동에서 민족주의 문화운동으로, 5부 일제에의 굴종, 그러나 다시 기사회생”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목차별 대신에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서평을 작성했다.

새로운 연구서에서 첫째,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둘째, 기존 지식과 다른 해석과 관점을 마주할 때 ‘기쁨’을 발견한다. 서평에서는 ① ‘신자유주의’, ② 식민지시기의 ‘정치운동’, ③ 민족주의계열과 동아일보계열이란 세 가지 주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모든 주제가 새로운 지식과 다른 관점의 즐거움을 주었지만, 특히 ①과 ②는 새로운 지식의 배움에서, ③은 당대 사상사와 정치사에 관한 새로운 관점 제시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의 제공과 관점의 제시는 쉽지 않다. 평생 연구가 교과서에 한 줄 반영되길 바라기도 한다. 이 책이 다루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국내 민족운동과 같은 ‘거대담론’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필자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국내 민족운동 등에 관련한 거대 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그사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필자의 문제제기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10)라고 밝혔다. 필자는 곳곳에서 논리적 근거와 토대를 ‘실증’에서 찾았다.

- ① 동아일보계열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그들이 타협적 자치운동을 전개하지 않았고, 신간회와 같은 문제의식을 민족주의세력 중에서 가장 앞서서 이미 1920년대 전반부터 주장하면서, 신간회 창립시기까지 관련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것을 이론과 실증을 통해 논증할 것이다(24).
- ② 일제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회 같은 자치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해결할 것이다(25).

- ③ 동아일보계열의 1920년대 초반부터 신간회 창립시기까지의 주장과 동향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세력을 타협과 비타협으로, 또한 좌파와 우파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자세히 밝힐 것이다(25).
- ④ 타협과 비타협으로 민족주의세력을 구분하는 것 등과 같이, 학계와 일반에서 당연한 역사적 사실로 알려진 여러 것들이 실제로는 실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여러 소재와 내용을 가지고 차례차례 실증할 것이다(61). (밑줄 강조는 인용자)

## 2. 정치적 개념인 식민지 ‘신자유주의’

역사가 어렵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낯선 역사적 개념과의 조우 때문이다. 어렵다고 해서 ‘마립간’, ‘골품제’, ‘음서’ 등의 개념을 현대어로 바꿀 수 없다. 로마의 공화정과 근대의 민주공화제 등을 등가로 간주할 수 없다. 시간의 추이 속에서 인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살펴보는 것을 역사적 맥락이라고 한다.

역사 자료의 정보화, 검색 기능의 활성화 덕분에 역사 사료에 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그 결과 관심 주제어의 검색을 통해 역사 관련 소재 발굴과 내용 구성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역사적 맥락 이해는 한 주제어, 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장악력에서 찾을 수 있다. 신문에서 관심 사안의 기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6~8면의 기사 속에서 조망하고, 잡지에서 한 필자의 글이 아닌 다채로운 구성과 편집 속에서 맥락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동아일보계열을 “국제정세 파악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었다. 때문에 『동아일보』 1면을 한 장씩 읽다 보면 당시의 일본제국

과 세계를 비교적 상세히 만날 수 있다.”(560)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계열의 노력이 ‘필사적이었다’는 의미 부여는 필자의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연구를 위해 “역사적 현실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68)라고 밝혔다.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자는 “이 책에서는 논지 전개를 위해 1920년 창간부터 해방 직후까지 거의 모든 『동아일보』의 사설과 논설, 기사들을 자세히 살피고 분석했다.”(62-63)라고 소회했다. 컴퓨터 화면, 출력본, 축쇄본 등으로 며칠치 신문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한 줄의 평가는 자료를 관통한 지난한 작업의 결과라고 이해된다.

학문은 개념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그리스의 민주정과 현대의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 한말~식민지 시기에 인용되고 언급된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의미망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신자유주의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서구 사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에서 있는 자본주의 사상”(28), ‘사회적 자유주의’라 불리기도 했다(143)고 보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비하면, 전자이면서도 자본주의의 여러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 ‘수정 자본주의’로 볼 수 있는 논리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정치사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신자유주의는 첫째,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점, 둘째, 그런 독립을 저해하는 이른바 사회악이 자연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치유 가능한 것이라는 점, 셋째, 그 과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인식의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148-149).

‘신자유주의’란 서양의 논리 혹은 이론이 동양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어떻게 소개되고 수용되었을까? 필자는 “서구 신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에 수용되고 있었다.”(152)라고 전제하면서, “민본주의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사상도 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153)라고 보았다. 그 영향은 동시대에 식민지 조선에 소개·수용되었다. “일제하 조선의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민족운동가들과 민족엘리트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송진우도 그 일원이었다.

소개와 수용의 차이는 무엇일까? 서구와 일본과 다른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송진우를 포함한 ‘그들’이 “일본 민본주의 사상의 사회개혁적 노선과 운동을 배우고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맞게 실천하려 했다. 또한 영국 신자유주의 사상이 추구하는 사회적 실천노선과 행동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고자 했다.”(53)라고 보았다. 식민지 민족주의계열 지식인의 ‘사회개혁’, ‘사회적 실천’ 등이 강조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 자본주의적 근대를 지향했던 이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서구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일본의 민본주의가 단순한 지적 논구가 아닌 사회개혁 사상이자 민주주의운동이었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51).

‘신자유주의’는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의 이론적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근현대 사상사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필자가 “수정자본주의 사상의 수용과 내재화의 측면에서 한국 민족주의 사상과 이념을 살펴보는 것 등과 같은 새로운 이해와 시도들을 여러 차례 할 것이다.”(61)라고 밝힌 방향 제시처럼, 민족주의에 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신자유주의가 지성사·사상사 연구에서 ‘익숙하지 않다’는 소박한 질문이 가능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제하 신문과 잡지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신칸트주의, 민본주의, 민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

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이념과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그 내용 속에, 당대 식민지 조선의 용어와 주장으로 녹아 있었다(37).

두 번째 질문은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영향력을 포함해서 다른 변혁의 사상과 어떻게 지형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여러 ‘주의’가 병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나아가 민족주의와 연결될 때, 필자는 “한국의 민족주의세력의 경우는 그 이념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수정자본주의적 민족주의, 보수주의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파시즘적 민족주의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71)라고 보았다. ‘적’ (的)이란 표현은 다양함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방안이지만 모호함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시민권 획득 과정은 사상사·지성사 연구의 새로운 진지가 구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자치운동과 민족주의 계열 ‘정치운동’의 경계

필자는 이 책에 관해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일제하 민족주의세력의 사상과 운동을 송진우와 동아일보 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10)이라고 천명했다. ‘트랜스내셔널’의 관점과 접근은 무엇일까? 근대 이후 공간적·시간적 압축 과정에서 세계적 조망 아래 지식과 사상의 소개와 수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에서 동양에서, 동양에서 각국으로의 번역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쉽지 않다. 당대 세계 정치는 물론 일본사에 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세력, 더 나아가 민족운동세력의 사상과 이념을 당대 서구와 일본 정치사상사의 동향과 관련해서 동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26)이라고 밝혔듯이 ‘동시성’을 찾는 어려운 과정이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인의 ‘정치’가 가능할까? 일제와 ‘친일정치세력’이 생각하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치와 민족운동세력의 정치는 구분되었다. 일제의 ‘자치제’ 주장에 관해 필자는 “조선총독부 국장급 관료들이 자치제를 주장하고 논의했다고 해서 이를 총독부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시 일본 정치권력 구조와 식민정책의 결정 과정을 간과하는 것이다.”(207)라고 보았다. 또한 일제하 민족운동과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친일정치세력의 내정독립론 또는 자치운동 주장과 민족주의세력의 합법적 정치운동 주장이 층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되어 버린다는 점”(260)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규명과 구조의 설정은 관련 연구 지평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 익숙한 지형은 일제의 ‘자치제’ 수용 여부로 민족주의계열은 ‘타협’과 ‘비타협’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 민족주의우파와 민족주의좌파로 규정해 왔다. 또한 타협과 비타협은 신간회 참여의 평가 기준으로 설명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일부 관리 및 관련자를 제외하고 일제는 ‘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신간회 및 민족통일전선(혹은 정치적 민족운동 중심체 결성)에 동아일보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족운동세력이 참여했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제기된 이러한 학문적 견해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자치운동의 추진이나 신간회 참여를 기준으로 민족주의세력을 타협과 비타협, 좌파와 우파로 나누는 것의 가장 큰 난점의 하나는 이것이 당시의 민족주의세력의 현실적 정치지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68).

새로운 관점의 제시다. 필자는 “친일정치세력의 정치운동과 민족주의세력의 합법적 정치운동이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이후 일제하 민족운동 전개, 더 나아가 신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가지 흐름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어렵게 된다. 잘못하면 일제하 민족 대 반민족의 기본적 대립구도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265)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세력의 ‘합법적 정치운동’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는 민족주의계열의 재정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합법적 운동경향이 곧 일제의 타협적 운동이냐는 점이다. … 합법운동이 곧 타협적 운동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211)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합법’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성립한다. 필자는 외연의 확장에서 방안을 찾았다.

국내에서 전개되는 민족운동은 조선공산당과 같이 비밀결사 운동이 아닌 한, 그 조건상 사회개혁적 성격의 운동, 민주주의를 위한 합법적 정치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 이런 운동들은 비록 합법적 형태를 띠고, 반제국주의와 절대 독립을 공공연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일제지배의 현실을 타파하고 식민사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었으며, 궁극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50).

민족주의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설정한 단위의 결속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라면 위의 규정에 동의할 수 있다. 일제하 민족주의세력은 “일제지배의 현실을 타파하고 식민사회를 개혁”이자 “민족의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계’, ‘회색지대’에 서 있는 혹은 서로 간에 ‘개량’, ‘수정’ 등으로 규정된 인물과 계열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민족주의세력(계열) 안에서 동아일보계열의 정치적 역할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4. 민족주의계열과 동아일보계열

이 책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와 동아일보계열에 관해 재조명하고 있다. 시간적 추이에서 필자는 『동아일보』는 “1920년 창간부터 1936년까지는 달랐다. … 진보적 논조와 태도가 상당히 유지”(57)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1930년대 중반까지 … 대중신문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동아일보계열의 정치신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93)라고 규정했다. 당대 언론매체의 역할과 위상은 지금과 달랐다.

최초의 한글신문은 『독립신문』이었다. 『독립신문』은 자신의 역할을 성인의 ‘학교’라고 규정했다. 오늘날 어느 영향력 있는 신문매체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언급이었다. 당대 『동아일보』는 하나의 언론매체를 넘어서 식민지 조선 사회에 영향을 크게 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상사와 운동사에서 일반적으로 ‘계열’이라는 호명은 민족주의계열, 사회주의계열로 사용되기도 하고, 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계열, 천도교계열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동아일보계열은 어디에 위치할까? 필자는 “일제하 국내 민족주의계열의 주요 정치세력으로는 기독교와 천도교계열, 그리고 언론계열 세력이 있었다.”(72)라고 해서 언론계열 세력을 민족주의 계열의 중요 정치세력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필자는 동아일보계열을 ‘일종의 정치세력’으로 간주했다(81). 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내내 동아일보계열은 정치세력이었다. 정치세력으로 보면 『동아일보』의 ‘폐간’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신문의 강제폐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안된 일이지만, 정치세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동아일보 세력들에게는 불행 중 큰 다행이었다(531). (밑줄 강조는 인용자)

동아일보계열을 ‘정치세력’으로 볼 때, 누가 동아일보계열에 속할까? 필자는 “이책에서 개념화하는 동아일보계열은 동아일보·중앙학교·보성전문으로 모였던 사람들과 이들과 긴밀히 결합된 호남 출신의 정치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다.”(81)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계열은 송진우와 밀접한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 세력으로 좁히면, ‘동아일보 주도세력’(229, 274, 470 등)으로 표현되었다. 시간적 추이에 따라, 참여 인물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계열의 구체적인 인물은 누구였을까? 필자는 『동아일보』 창간 초기 “동아일보의 사설 등을 직접 쓰면서 논지를 주도한 것은 장덕수, 김명식, 이상협에 한정되었다.”(82)라고 보았다. 장덕수, 김명식 등이 소속된 단체 사회혁명당이 주목되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의 논지는 한편에서는 사회혁명당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상협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84)라고 서술했다.

점차 “신문 사설에 관여했던 김준연, 박찬희, 설의식, 장덕수, 함상훈, 김양수, 최원순 등과 주요 논객이었던 이순탁, 정인보 등 사이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93)라고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1920년대 전반시기 동아일보를 대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성격을 단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역사적 사실과 아주 다른 것이다.”(88)라고 평가했다. ‘정치세력’ 동아일보계열에 필자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했다.

- ① 민족주의 우파는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민족주의 좌파는 정치적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했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동아일보계열들은 1922년부터 정치투쟁과 정치운동을 어느 세력들보다 먼저 제기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민족운동세력들보다 정치지향적이었다(213).
- ② 민족적 중심세력론으로 표출된 동아일보계열 정치론의 특징은 그것이 기존 민족주의세력이 주장하던 정치운동의 필요성과 민족적 중심세력의 조직 결성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종의 합법적 공간에

서의 정치운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271).

새로운 지식과 관점의 제시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동아일보』라는 언론매체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의미 부여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 정치운동’으로 식민지 정치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면, 동아일보계열의 정치적 지향은 강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계열의 ‘정치투쟁’은 실현되지 못했다. ‘합법’ 공간과 영역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필자는 이를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466)이라고 해서 조직기반이 없는 언론기관 동아일보가 지닌 태생적 ‘한계’에서 찾았다. 이 주제는 조선일보 등의 다른 매체의 사례는 어떠한가 등의 물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치세력’으로 동아일보계열을 설정할 때, 내부 구성원의 관계망 설정이 물음으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김성수와 송진우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동아일보계열에 관해 필자는 김성수로 대표되는 흐름과 송진우로 대표되는 흐름을 구분한다(104). 그리고 송진우로 대표되는 흐름이 “기호와 세력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세력이며 … 동아일보계열의 주도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다.”(237)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연구주체의 선택과 친착은 ‘애정’을 기반으로 한다. 필자의 연구주체인 송진우는 “동아일보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동아일보계열의 핵심 지도자”(375), 혹은 “송진우는 김성수와 달리 일제 말기에도 친일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96) 등으로 평가된다. 송진우를 평가하는 데 김성수가 언급된 점이 주목된다.

인물평가에서 관련 인물 상호간의 ‘대비’가 이루어지면, 비교되는 인물에 관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기 쉽다. 당대 호사가(好事家)는 흔히 여러 인물을 즐겨 하나의 단위로 설정했다. 언론매체 동아일보를 언급하면 김성수와 송진우는 함께 한 단위로 설명되었다. 김성수는 보성전문과 현상윤, 경

성방직과 김연수 등과 함께 언급되었다. 동아일보계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설명하면서, 일제 말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활동이란 결과를 바탕으로 양자를 이른바 계급이라는 ‘태생적’ 차이에서 찾는 것은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 5. 진지의 구축과 새로운 돌파구

역사 연구에서 사상사는 시대의 사상(思想)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사상은 하나의 이론이 당대 사회에 영향을 주어 무언가의 변화를 일으키는 논리와 이론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는 시대의 사상적 ‘변화’는 ‘변혁’과 연동되었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식민지 해방운동과 논리의 규명이었다. 그러나 변혁과 연동된 치열함은 지속되기 어려웠다. 1989~1990년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로 20세기를 대변하는 한 축인 현실 사회주의가 사라진 것도 한 이유였다.

사상사 연구의 ‘동력’이 상실되어 보였다. 이론은 ‘회색’이 되고 말았다. 사상사 연구자들 가운데 ‘진지전’이 논의되었다. 다시 자료를 차분히 읽으면서 근본부터 답을 찾고자 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진지의 구축도 쉽지 않았고, 돌파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필자는 사상사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나아가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중 신간회 시기와 해방직후 시기 부분을 제외하고 일제하 부분만을 보강해서 출간한 것이다.”(9)라고 밝혔다. 새로운 학문장(場)의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1980~1990년대를 설레게 했던 “이곳이 로도스 섬이다. 여기서 뛰어보라!”란 말이 있다. 잘 달린다고 과장된 말만 앞세운 사람에게 이곳을 로도스 섬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행동을 요구한 맥락이라고 한다. 맑스도 언급했다는 이 구절에 관해, ‘오독’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의미하는 이론적 실천으로 읽고 싶다.

공부와 연구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1980~1990년대에는 공동세미나, 공동학습 등으로 ‘함께’하는 것이 익숙했다. 필자는 이 책을 “한국의 자유주의는 이런 모습으로 일제하에서 형성되었고, 해방 후에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런 모습’, ‘그 모습’의 실체를 필자가 밝힐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의 학문적 지형 변화와 전환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필자가 준 학문적 자극을 바탕으로 함께 도약하고 싶다.

